

정부, 유사 휘발유 근절대책 “고심”

대기오염에 자동차 노후화 촉진 ... 원료 솔벤트 판매기업 단속 강화

유사 휘발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유사 휘발유의 주 원료를 생산하는 솔벤트 제조기업에 대한 특별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.

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세녹스 등의 <유사 휘발유 유통방지 대책>을 3월27일 제시했다.

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솔벤트 제조·판매기업은 수급상황기록부를 매달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.

또 첨가제의 혼합 비율을 1% 미만으로 제한하고 첨가제 판매 용기의 크기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.

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사 휘발유 가운데 <세녹스(Cenox)>는 솔벤트 60%, 톨루엔(Toluene) 30%, 메틸알코올(Methyl Alcohol) 10% 정도를 혼합해 제조한 것으로 <LP-Power> 등 세녹스 아류의 유사 휘발유도 나오고 있다.

유사 휘발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차량 노후화를 촉진시키는 점이다.

자동차 연료계통의 알루미늄 부품의 부식을 가져오고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(NOX)과 Aldehyde의 배출량을 크게 증가시키며 방향족 물질을 다량 함유해 연소하면 일산화탄소(CO) 등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“유사 휘발유가 유통되는 상황이 지속하면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주유소의 판매량이 줄어 수익성이 악화하는 등 정상적인 유통채널의 구조를 취약하게 할 우려가 있다”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3/27>